

大學院教育 강화를 위한 社會的 과제

孫 東 鉉

(成均館大 哲學科)

1. 머리말

오늘날은 변혁의 시대이다. 국제적인 정치적 질서의 변화만이 급격하고 근원적인 것이 아니다. 문명의 패턴 자체에 근본적인 변화가 요청되고 있고 또 그러한 변화가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 계몽시대 이래 유럽인들이 신봉해 왔던 인간의 보편이성이 인류의 행복을 위해 결코 순기능만을 발휘해 왔다고 볼 수 없게 된 것이 현대요, 이제 그 역기능의 수위가 인류의 삶을 위협할 지경에 이르렀음을 각성하게 된 것이 현대이다. 인류는 새로운 국제사회적 질서와 더불어 새로운 價値觀, 새로운 知識體系를 창출해내야 할 시점에 서 있다.

새로운 가치관과 새로운 지식체계를 창출해내는 일을 떠맡아야 할 사람은 누구인가. 두말할 것도 없이 그것은 大學 및 大學人의 과제이다. 어느 나라에서든 고등교육기관으로서 또 고등연구기관으로서 대학의 기능은 이 과제의 수행에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이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오늘 우리의 대학은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2000년대라는 세기적 세 시대에 문명세계의 의곽으로 밀려나 도태되지 않으려면, 저 새로운 지식과 가치의 창출이라는 과제를 차질없이 잘 수행해 나가야 할텐데,

이 일의 주역이 되어야 할 우리의 대학은 과연 그에 걸맞은 자세를 갖추고 있는가?

연구와 교수, 그리고 사회적 기여로 요약되는 대학의 사명을 염두에 두고 오늘 우리의 대학 현실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오늘의 우리 대학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저와 같은 시대적 요청이 특히 大學院 教育에 집중되고 있음을 감안해, 이 소고는 대학원에서의 연구 및 교수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우리 사회가 어떤 자세로 어떤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지 그 통론적 조망을 해보고자 한다.

2. 大學의 이념과 大學院의 위상

대학이 설립되고 발전해 온 역사적·사회적 배경이 다름에 따라 대학의 이념과 기능이 조금씩 다른 것은 구미의 여러 나라 대학들에서 엿볼 수 있는 바다. 대체로 영국의 대학들은 학자나 전문가를 양성하기보다는 교양교육을 통해 인격적으로 균형잡힌 유식한 신사를 배출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고, 독일의 대학들은 지식전수의 교수 기능을 넘어서 창조적이고 독창적인 전문 연구기관으로서 새로운 출발을 했었으며, 이들에 비해 볼 때 미국의 대학들은 발전하는 산업에 필요한 기술인의 인적 자원을 양성해 지역사회에

충실히 봉사하는 특성을 지녀왔다고 서로 구별 지어 특징지우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오늘날 지식의 획득(연구), 지식의 전수(교수 혹은 교육), 그리고 지식의 응용(사회봉사)이 세 가지 중 어느 하나만을 대학의 기능 내지 사명으로 여기는 나라는 없다. 연구와 교수 그리고 사회적 기여, 이 세 가지는 모두 오늘날 어느 나라에서든 대학이 수행해야 할 과제이자 추구해야 할 이념에 틀림없다.

그런데 앞서 머리말에서 말한 '새로운 지식과 가치의 창출'이라는 과제에 초점을 맞춰 볼 때 오늘날 우리가 대학에 대해 요청해야 할 첫번째 기능은 곧 研究機能임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기성의 지식체제나 가치관이 더 이상 그대로 통용될 수 없는 새로운 시대를 눈 앞에 두고 있다고 할 때 새로운 지식 및 가치의 창출, 새로운 가치관의 정립은 우선 연구를 통해 수행될 수 있는 일이고, 이의 전수 및 활용은 그 다음 단계의 과제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연구 중심의 대학원 운영이 대학 운영에 있어 점점 더 중핵적 의의를 갖게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특히 오늘의 우리 대학 현실에 눈을 돌려 볼 때, 대학이 제구실을 다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大學院의 位相이 제고되어야 함은 긴요한 일이다.

그 근본적 이유는 대학(학부)교육의 大衆敎育化 현상에서 찾아진다. 대학교육의 기회가 보다 많은 대중에게 주어진다는 것 자체가 나쁠 까닭은 없다. 그러나 지난 20년간 대학(일반대학) 수효가 70개교에서 115개교로 증가하고 대학생 수가 15만 명에서 110만 명으로 증가해 온 사정을 감안해 볼 때, 이들 대학에 새로운 지식과 가치의 창출이라는 연구기능을 일괄적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운 일일 것이다. 대학이 무슨 제조업체가 아닌 이상 급속한 양적 팽창이 질적 저하를 가져오리라는 것은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는 일이다. 이제 우리나라에선 대학교육이 상당부분 일반대중의 수준높은 교양교육 정도로 변모했다고 보아 무방할 것이요, 따라서 연구기능 보다는 교육기능이 그 주된 기능으로 자리잡은 대학에서 그래도 연구기능을 기대할 수 있는 곳이 대학원임은 자명한 일이다.

대학(학부)이 대중교육의 장으로 된 때에는 물론 오늘날 교수되어야 할 지식의 양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도 그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정예의 연구인력이 새로운 지식을 창출해내는 데에 학부과정만으로는 불충분하기 짝이 없게 된 것이다. 이제 그와 같은 과제는 대학원으로 넘겨질 수밖에 없는 일이다.

특히 우리의 교육 현실에서 대학이 대중교육 기관화하는 데 크게 작용한 것은 尙文 정신을 바탕으로 한 지나친 교육열이다. 복잡한 역사적·사회적 배경을 안고 있는 사회적 태도의 하나인 이 교육에 대한 관심은, 물론 사회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대학의 문화적·사회적 기능을 번갈게 하는 데에도 일조를 하여 대학이 갖는 학문적 탐구의 기능을 흐리게 한 것도 부인키 어려운 일이다. 학문적 탐구보다는 보다 안정된 사회적 신분의 확보를 위한 준비과정으로서 대학교육을 받아들이는 것이 크게 일반화되고 있는 현실이고 보면, 새로운 지식의 창출이라는 연구기능은 대학원에서 수행될 것으로 기대해야 할 것이다.

3. 大學院敎育 강화의 國家的 필요성

대학의 사명 중 근본적인 것은 연구요 오늘날 특히 우리의 교육 현실에서는 그 기능의 수행이 대학원에 돌려지고 있다는 것——이것이 이제까지의 우리의 진단이었다. 그렇다면 대학원에서 수행되어야 할 연구는 어떤 의의를 갖는가. 머리말에서 앞질러 암시한 바는 있으나 이제 그 의의를 특히 국가경영의 관점에서 확인해 보기로 하자.

오늘날 국제사회에서의 경쟁은 군사력에 의거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經濟力에 의거해서 이루어진다. 군사력이란 것도 경제력에 결정적으로 의존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이 경제력은, 특히 '정보화 시대'라는 오늘날에는 지식과 기술을 창출하는 인간적 능력에 크게 좌우된다. 국제적 경쟁을 '경제전쟁'이라 일컫고 이 전쟁 아닌 전쟁을 수행하는 국가마다의 자세를 '기술패권주의' 또는 '지식민족주의' 등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이러한 현실을 잘 반영하고

있다. 국제적 경쟁에서 한 국가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지식과 기술의 창출능력을 다른 국가보다 더 우월하게 배양해 견지해야 한다는 귀결은 이에 자명한 것이다.

경제력이 자연적 요소에도 크게 의존됨을 부인해선 안 되나, 자연적 여건이라는 것이 이미 주어진 제한된 것일진대 우리가 도모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창출해내는 일이다. 이보다 더 나은 것인 배양해 지니는 일이다. 이와 같은 일을 수행해낼 기관이 곧 대학이요, 그 중에서도 대학원은 앞서 살펴본 대로이다. 새로운 지식과 기술의 창출이 대학원에서의 연구활동이라면, 그러한 창출능력을 배양하는 것은 곧 대학원에서의 교수활동이다.

연구와 敎授를 내용으로 하는 대학원 기능의 강화가 국가의 생존과 번영에 필수불가결한 결정적 요건이 됨은 가까운 일본이나 유럽의 후진국 독일이 근대화를 추진한 과정에서 역사적으로 확인되기도 한다. 이른바 明治維新이라는 근대화 작업에 있어 일본이 동경대학, 경도대학 등 국립대학을 설립해 서구적 문물의 수용을 위한 관료 양성과 더불어 새로운 지식의 수용 및 창출 능력을 배양토록 많은 젊은 학자를 지원한 것은 그 후 일본의 발전을 위한 밑거름을 마련한 일이었다. 근대 독일에서도 주변국에 비해 나후된 국가적 상태의 극복은 연구중심의 훔볼트대학의 설립과 더불어 본격적인 케도에 올랐다고 하겠다.

4. 大學院 敎育 不實의 원인들

대학원에서의 연구와 교수가 이토록 긴밀한 의의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서양식 대학제도가 정착된 지 반세기가 다 되도록 아직 대학원이 제구실을 거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 우리는 좀더 구체적으로 이러한 현실의 원인을 찾아보고, 나아가 이의 극복을 위한 대책을 구상해 보기로 하자. 대학원이 우리 대학사회에서 아직도 충실한 연구기능을 수행해내지 못하고 있는 원인으로 우리는 다음의 다섯 가지 요인을 들고자 한다.

첫째, 대학에 대한 국민일반의 그릇된 관념이

그것이다. 위에서 대학의 대중교육기관화에 대해 언급한 바 있지만, 대학원을 포함해 대학 일반에 대해 일반인들이 학문탐구의 고유한 사명을 부여하는 뚜렷한 의식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다. 학문적 탐구란 본래 그 성과물이 단지 일내에 구체적으로 나타나 보이지 않는 법이어서 서구 대학의 발원 및 전통에 대한 이해가 없는 일반인으로서 學問 探究의 意義를 보통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들에게 대학이란 사회적 신분보장 또는 신분상승을 위한 과정이든지 혹은 단순한 직업선택의 준비과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형편이다. 대학에 대한 인식이 이러하다 보니 근자에는 대학원에조차 학문탐구의 동기에서보다는 그밖의 동기—단순한 학력고급화, 취업좌절에 대한 보상, 새로운 진로에의 유예 등등—에서 진학하는 사람들의 수효가 경제적 여건의 개선과 더불어 늘고 있는 형편이다. 이러한 현상은 지난 20년 사이에 5,000여 명이었던 대학원생 수효가 10만 명선을 넘도록 증가했다는 데에서도 부분적으로 확인되는 바이다.

둘째, 더 실질적 영향력을 가졌던 요인은 교육당국의 대학원 政策 不在에서 찾아진다. 그간 문교부(교육부)가 교육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초등교육에서의 의무교육 실시, 중등교육에서의 교육 평준화, 고등교육에서의 대학입시 등의 문제에 행정적 관심의 대부분을 빼앗겨 온 것은 일반에게도 다 드러난 사실이다. 대학원교육에 대해서는 형식적이고 관행적인 조치 이외에 어떤 교육적·행정적 기본방책이라도 수립되어 왔었는지 거의 알려진 바가 없는 형편이다. 각 대학에서 대학원 과정 설립을 신청해 올 때 교육·학문 외적인 배려—이들테면 수도권 인구분산 정책 등—외에 어떤 학술적 척도에 따라 내실있게 이를 심사·허가해 왔는지 지극히 형식적인 요건—박사 학위를 가진 교수가 몇 명 이상 있어야 한다는 등—외에는 알려진 것이 별로 없다. 교육당국에 그런 학문적 수준과 질을 심사할 의도나 능력이 있었는지 의심나게 하는 것의 하나로는 앞서 말한 대학원생의 급증과 더불어 대학원 과정 개설의 엄청난 증가('65년 37개에서 '91년 316개로 증가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편, 『대학교육 발전지표』, 1992, p. 11.)를 들 수 있다. 대학원 과정 개설의 허가에 장기적인 계획이 미리 수립되어 있어서 분야나 학문적 수준 등을 고려한 효과적인 심사와 선별이 있었는지의 심스러운 바다. 그저 임기응변적으로 무분별하게 대학원 개설을 허가해 주고 그 후속조치로 어떤 감독이나 지원도 제대로 해오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면, 교육당국의 이러한 대학원 정책은 대학원교육의 국가적 의의를 회색시킴에 충분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교육부 이외에 치열한 국제적 경쟁의 와중에 고급 연구인력의 필요성을 절감하는 실무부서—이른바 상공부나 과학기술처 등—에서 현실적 요구에 부응키 위해 고급 연구 및 교수기관을 따로 설립·운영하려는 것은—과학기술대학 및 과학기술원의 존재가 바로 이에 해당하겠거니와—한 정부 안에 학술 및 고등교육에 관한 별개의 부서가 통합성 없이 따로 움직인다는 불합리성·비효율성·비통일성의 증거라 하겠다.

셋째, 大學院의 연구 및 교육활동에 대한 支援이 미미하다는 사실인데, 이는 방금 지적한 교육당국의 대학원 정책의 부재와 직결되는 사항이다. 대학원의 연구활동 지원에 관해서는 두 가지 문제를 구분해 생각해 보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하나는 현재의 교수나 연구인력에 대한 지원의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장차의 전문 연구인력의 양성에 대한 지원 문제이다.

먼저 현재의 교수나 연구원에 대한 研究活動 지원의 현실을 생각해 보자. 우선 대학원 과정에 전속되어 일반 대학교육(교양과목이나 학부 과목의 강의 등)의 부담없이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는 교수나 연구원이 거의 없다는 제도적 취약점이 지적될 수 있다. 대학원에서의 연구활동이 학부에서의 전공교육에 부차적으로 수반되어 있는 것 같은 모습이 우리의 현실이다. 그 다음으로 연구시설의 미비를 들 수 있다. 장서를 비롯한 도서관 시설의 빈약함이나 실험장비 등의 부족은 과학기술원이나 포항공대 등의 예외를 제외하면 실례를 구체적으로 거론할 필요조차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태이다(학생 1인당 도서관 장서수가 80권 이상인 대학이 126개 일반대학 중 11개 대학뿐이요, 학술잡지 수가 0.7권이

상인 대학이 4개 대학뿐이다. 또 실험장비는 차지하고 실험실습실을 법정기준에 합당하게 확보하고 있는 대학이 28개교에 불과하다: 앞의 책, p. 119, p. 124 참조). 마지막으로 실질적인 연구 성과를 기대하는 데 요구되는 연구비 지원이 영세하다는 점이다. 연구의 성과가 직접적인 유용성과 거리가 있는 인문학 분야나 기초과학 분야의 연구에 있어 학내외를 막론하고 연구비의 지원은 더욱 영세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분야의 연구가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 더 필요한 기초가 될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소홀히 되고 있음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연구비의 지원은 특히 기초 자연과학 분야에서 큰 규모로 요구되는데, 실제의 지원 규모가 뒷수로나 액수로나 영세함은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연구주체당 200~300만 원의 연구비 지원 빈도수가 가장 높다: 앞의 책, p. 92).

그러면 이제는 장차의 전문 연구인력의 양성을 위한 지원문제를 생각해 보자. 대학원 기능은 지식의 생산이라는 1차적 연구기능 외에 지식생산 능력을 생산하는 2차적 연구재생산 기능도 갖는다. 이 후자는 이른바 ‘學問後繼世代’ 양성의 기능이요, 이에 대한 지원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런데 현재 우리 대학 안팎의 실정은 이 문제에 있어서 더욱 불모에 가깝다. 한창 연구능력 배양에 전념해야 할 연령의 젊은 학도들이 생계를 위해 혹은 요석적인 경력 쌓기를 위해 학문의적인 일에 시간을 빼앗기거나 시간강사로서의 부담을 감내하고 있는 것이 보편적인 현실이다. 사실 10년, 20년 후 국가의 국제경쟁능력이 이들의 능력에 달려있다고 생각할 때 기성교수들의 연구가 부실한 현실보다 이들이 學問的 能力 培養의 시기를 부실하게 보내고 있는 현실이 더욱 심각한 것이라 하겠다. 더구나 국내외에서 일정한 과정을 거쳐 막 새로운 연구인력으로 태어난 젊은 박사들이 제대로 그 능력을 발휘하고 심화시킬 일 자리를 못 찾고 우왕좌왕한다는 현실은 국가적 낭비를 넘어 ‘정보시대’를 맞이함에 위험신호까지 심각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서울대학교 석·박사과정 학생 중 연구활동의 대가 및 장학금으로 생계비를 충당하는 사람은 1%에 불과하다: 조

홍식, 『학문후속세대 연구지원에 관한 실태조사』, 서울대 토론회 발표논문, 1992. 10. 9, p. 15 참조 ; 월평균 소득 147,000 원에 불과한 젊은 시간강사들의 수요가 전국적으로 전체 교수수 3만 7천여 명에 육박하는 3만 4천여 명이며, 최악의 사례가 될지 모르겠으나 해외유학에서 학위를 취득한 경우 —전체의 70%—를 포함, 약 100명의 정치학박사가 현재 미취업상태에 있다는 사실 등은 장차의 연구인력 양성·지원이라는 관점에서 보아도 ‘고학력 실업’의 문제 이상으로 심각한 것이라 하겠다 : 『주간조선』, 1992. 11. 19일자 참조).

넷째, 대학 내부의 요인이다. 대학원의 설립을 진정 연구기능의 강화 및 후속연구인력 양성이란 학문적 목적에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교세확장이라는 集團利己의 動機에서 또는 재정적 이득을 추구하기 위해 추진하는 경우는 없는가 검토해 볼 일이다. 사립대학의 경우, 별도의 인적·물적 투자없이 財政的 이득을 도모할 수 있는 방도로 대학원을, 특히 전문대학원 혹은 특수대학원 설립을 도모해 왔던 것은 상당부분 부인하기 어려운 사실일 것이다. 따라서 대학원 과정에 연구지원을 강화한다든지 학사관리 등 엄격한 학문적 관점에서의 행정적 뒷받침을 충실히 한다든지 하는 바람직한 대학원 운영은 처음부터 무망한 일이 아니었는지 반성되어야 할 점이다. 대학원에서의 연구와 교수는 학문적으로 높은 수준의 역량이 비축된 뒤에나 가능한 것일텐데, 과연 그러한 성숙된 여건 속에서 대학원이 설립되고 운영되고 있는지, 많은 대학들이 있어 사정은 부정적이라고 본다. 이러한 현실은 앞서 원용했던 대학원 과정 신설의 급증현상에서도 간취되고, 또 학위의 壟産 현상에서도 간접적으로 인지된다. '80년 초 600~900명에 불과하던 박사학위 배출 수요가 '92년에 3,348명으로 4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학문적 연구능력이 충분히 배양되지 않은 박사를 양산해서 고학력 실업자를 늘린다면, 이는 지식의 생산·관리가 국가경쟁의 중요 주제가 될 새 시대에 난센스가 아닐 수 없다.

다섯째, 학술적 연구의 성과 및 학문후속세대 양성을 간접적으로 선진외국의 대학에 의존해 왔

던 현실이다. 흔히 ‘기술도입’이란 말을 쓰거나 와, 이 말은 곧 우리의 대학이 수행해야 할 기능을 외국의 대학에 의존해 왔다는 말 외에 다른 게 아니다. 사실 많은 해외 유학생이 학업을 마치고 귀국해 대학에서 연구와 교수에 종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미개발 상태로 남아 있는 많은 연구분야에서 필요한 새 지식은 비싼 값을 치르고 수입해 올 수밖에 없는 일이다. 그러나 이는 곧 극복되어야 할 문제거리이다. 知識에 있어서의 對外 依存은 결국 문화적 식민상태에 빠질 위험이 있다는 사실 말고도, 과연 우리에게 필요한 새로운 지식은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 손으로 제련돼 나와야 適合性을 갖는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지식민족주의’나 ‘기술패권주의’나 하는 말로 표현되고 있듯이 첨단과학 분야의 지식이나 기술은 국경을 넘어 쉽게 이전되는 것이 아닌 데다, 오랜 기간에 걸친 기초과학 분야에서의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얻어질 수 있는 것이므로 대학원에서의 연구·교수 기능을 더 이상 외국의 교육기관에 의존해서는 안 될 일이다.

5. 大學院教育 강화의 方策

이제까지 우리는 다소 장황하게 대학원 교육이 부실하게 된 원인을 살펴보았다. 이 진단이 비교적 현실적인 적합성을 갖는 것이라면, 앞으로 대학원교육의 正常化 내지 強化를 위해 어떤 정책을 세워야 할지는 이 진단으로부터 도출되어 나오리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이를 다음 네 가지 항목으로 정리해 보고자 한다.

첫째, 사회 일반의 大學觀이 획기적으로 바뀌어야 되겠다. 새로운 지식과 가치의 창출이 국제경쟁의 시대에서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인식하고 그 과제를 수행하는 곳이 다름 아닌 대학임을 분명히 인식해야만, 대학원에서의 연구와 교수활동이 그 본래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도모할 여러 정책이 비로소 서고 그 실현에 노력이 기울여질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학인파 산업 및 경제계 일부에서나 이에 대한 인식이 있을 뿐 그밖의 우리 사회 어느 영역에서도 대학

에서의 연구와 교수가 갖는 국가적 중요성을 실감하고 있는 것 같지 않다. 특히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정치권에서 이에 대한 뚜렷한 인식을 결하고 있는 것은 유감스럽기 짝이 없는 일이다. 태평양 전쟁을 수행한 일본이 그 전쟁 말기에도 서울의 경성제국대학 도서관 장서 구입비를 다 쓸 수 없을 정도로 책정·지출할 수 있었던 것은 대학의 연구기능에 대한 정치권의 확고한 의식이 뒷받침되었기에 가능했을 것이다.

둘째, 교육 당국에서 綜合的大學院 政策을 수립하여 장기적인 안목에서 연구와 교수를 유도·후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소수정예의 대학원을 집중적으로 후원하여 고급 지식의 창출을 가능케 하는 일이다. 대학원교육이 대중교육이 아닐진대 전국 각 대학원에 학문적 수준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똑같은 정책을 적용시키려 한다면, 현실성도 없거니와 효율성의 측면에서도 문제가 생길 것이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는 분야별·영역별로 각 대학의 대학원을 特性化시키는 일도 기획합적하다. 그러던 이에 대응하여 각 분야의 전문인력을 재교육시키는 프로그램도 지금의 특수·전문대학원에서보다 더 다양하고 심도있게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와는 별도로 프랑스의 고등사범학교(école normale supérieure) 같은 최고 학문인력 양성기관을 따로 설립하도록 할 수는 없을지라도, 현재 가장 우수한 여건을 갖추고 있는 몇몇 대학원에 최고 수준의 연구·교수 기능을 맡도록 하여 지원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일이다. 시행한다 하더라도 시간은 걸리는 일이겠지만, 지금의 상태로는 대학원이 제 역할을 다 할 수 없는 것이 분명한 이상, 이러한 집중화·다양화를 통한 효율화 정책은 꼭 필요한 것이라 본다.

셋째, 대학원의 研究·敎授 機能을 다방면에서 지원하는 제도적·관행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겠다. 국립대학의 경우 정부의 지원, 사립대학의 경우 재단의 지원이 우선 더 확충되어야 함은 말할 필요도 없겠지만, 더 나아가 산업·경제계의 지원도 기대해 마땅한 일일 것이다. 이미 우수한 기업에서는 재단을 설립해 학술적 연구를 지원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러한 활

동이 더욱 내실있게 확충되고 그 범위도 넓어져야 하리라고 본다. '産學協同'이라는 말은 강조된 지 오래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이 바람직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산학협동에 있어 중요한 것은 단기적인 안목을 넓혀, 직접적인 이득이 아닌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유용성이 연구성과물로서 기대될 수 있도록 하는 일이다. 기초과학 분야의 지원은 이러한 안목 없이는 불가능할 것이다. 산업체로서는 고급인력 양성에 투자하는 것이 길게 볼 때 기업의 신장에 확실한 기초를 얻는 일이기도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각 대학당국이 大學院 運營에 대해 획기적인 새로운 태도를 가져야 하리라고 본다. 각 대학은 그 대학의 대학원 여건에 대해 누구보다도 잘 알 것이요, 따라서 무원칙하고 비합리적인 측면이 있다면 이를 가장 잘 아는 것도 역시 각 대학일 것이다. 재정의 어려움만을 탓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좀더 적극적으로 학문적 관심을 갖고 개선·개혁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여건이 형편없이 미비되어 있음에도 학문의 동기에서 대학원 운영을 시도한다면 이는 국가적 관점에서 볼 때 낭비요, 인륜적 관점에서 볼 때 부도덕한 일이다. 앞에서 문교당국이 무분별하게 대학원 과정 설립을 허가해 준 것에 대해 지적한 바 있지만, 과연 그 많은 대학원이 새로운 지식과 가치의 창출에 공헌한 바가 얼마나 되는지 각 대학 당국자는 아마 잘 알 것이다. 정책적으로 치열한 競爭의 原理가 교육계에도 가차없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아직 행정적 규제에 가려져 이 원리가 기능하지 않음을 이용하는 일이 대학원에서의 연구 및 교육을 空洞化시키는 데 기여하는 현상은 대학인들 스스로에 의해 종식되어야 할 것이다.

6. 맺는 말

이상에서 우리는 대학원에서의 연구 및 교육이 국가공동체적 삶에 왜 중요한지, 현재 우리의 대학원은 왜 그 본래의 소임을 다 못하고 있는지, 이렇게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이 극복된다면 어떤 점들이 개선되어야 하는지 등을 살펴보았다. 이제 우리는 이 논의를 마치면서 이 문제

와 연관되는 더 근본적인 우리의 社會相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대학원에서의 연구와 교육이 바람직한 모습으로 수행되어야 하는 이유는 결국 우리 사회 전체가 하나의 국가공동체적 생명체로서 생존·번영해야 한다는 당위에서 찾아질 것이다. 그런데 다른 한편, 위에서 살펴본 여러 개선책들은 우리 사회가 전체적으로 건전하게 움직일 때, 즉 우리 사회생활이 올바른 가치관에 의거해 정상적으로 영위되고 이를 기초로 전체적인 조화를 찾을 수 있을 때 무리없이 시행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대학 내지 대학원의 연구 및 교육 기능도 우리 사회 전체의 조화로운 기능을 전

제로 할 때 온전하게 기대될 수 있다는 것이다.

대학의 사명이 국가사회의 발전에 기여함에 있는데, 다른 한편 국가사회의 건전한 풍토가 대학으로 하여금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면, 여기서 우리는 하나의 循環構造를 보게 된다. 대학의 발전에 대한 희망이 이와 같은 순환구조에 의해 약화됨을 우리는 현실 속에서 경험한다. 따라서 이 순환구조에도 불구하고 이를 극복하려는 대학인의 창의적인 활동을 기대하고 촉구하는 일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건강을 되찾는 일에 정치사회적 관심을 갖는 것이다. 대학에 대한 사회일반의 기여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된다고 본다. ■